

해양수상레저 기구산업 활성화 전략 연구: AHP 기법을 중심으로

조재권¹ · 박지윤² · 이철원³

¹연세대학교 석사 · ²연세대학교 강사 · ³연세대학교 교수

A Strategic Study on the Revitalization of the Marine and Water Leisure Equipment Industry: Focusing on the 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

Cho, Jae-Kwon¹ · Park, Ji-Yoon² · Lee, Chul-Won³

¹⁻³Yonsei University

Abstract

This research is to find out key factors for revitalizing the marine and water leisure equipment industry and to analyze their relative priorities through a literature review, expert interviews, and an 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 Five main categories and 20 sub-factors were developed based on previous studies and expert input. AHP analysis using responses from 32 experts showed that “Expansion of Cultural Engagement” ranked as the most important factor, followed by “Infrastructure Development and Improvement” and “Policy and Institutional Foundation.” At the sub-factor level, “Development of Leisure Complexes and Experiential Facilities” was the top priority, along with community-linked cultural infrastructure and marine leisure SOC. Technology-related factors showed comparatively lower importance. Industry experts emphasized cultural and experiential factors, while academic and public institution experts prioritized regulatory and infrastructural foundations. The findings provide practical insights and foundational data for policy development and strategic planning in the marine leisure equipment industry.

Key words : marine and water leisure equipment industry, industrial revitalization factors, 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 expert interviews

본 논문은 주 저자의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내용을 수정 및 보완하여 작성되었음.

주요어 : 해양수상레저 기구산업, 산업 활성화 요인, 계층분석법(AHP), 전문가 인터뷰

Address reprint requests to : Lee, Chul-Won

E-mail: wakeford@yonsei.ac.kr

Received: April, 30, 2026 Revised: June, 8, 2026 Accepted: June, 24, 2026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한국은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풍부한 강과 내수면을 보유하고 있어 해양 및 수상레저 스포츠 성장에 매우 유리한 지리적 조건을 지니고 있다(김희원, 2023). 국민 소득 수준 향상과 주 5일제 근무 정착에 따른 여가시간 증가는 서핑, 스탠드업 패들보드(SUP), 웨이크보드 등 다양한 해양수상레저 활동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빠르게 확대시키고 있으며(김충환, 2023), 이러한 활동은 단순한 취미를 넘어 새로운 라이프스타일과 여가 문화로 자리 잡고 있다. 유엔 세계관광기구(UNWTO, 2023)에 따르면 전 세계 관광 수입의 상당 부분이 해양·수변 관광과 연계되어 있으며, 국내 해양레저관광 소비 규모 역시 2023년 약 40.9조 원에 이르는 등 전년 대비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해양수산개발원, 2024). 이러한 변화는 해양수상레저 활동이 개인의 여가 만족을 넘어 국가·지역 경제와 직결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김정태, 2021).

이러한 흐름에 부응하여 정부는 해양레저 산업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고 있다. 2024년 제정되어 2025년부터 시행된 「해양레저관광진흥법」은 해양레저관광을 독립적 정책 영역으로 규정하고, 해양레저관광지 지정,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 인프라 확충 지원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해양수산부, 2025). 강원도 양양·고성, 경상남도 남해안 등의 지역에서는 해양레저 복합단지 조성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2025 해양레저관광박람회’에서는 수백 개 기업이 참가하여 최신 수상레저 장비와 스마트 기술, 정책 방향을 공유하는 장이 마련되었다(임중현, 2025). 그중에서도 경기도 시흥에 조성된 인공 서핑파크 ‘웨이브파크’는 시간당

1,000회 이상의 인공 파도를 발생시키는 기술 인프라를 기반으로 사계절 서핑 체험 환경을 제공하며, 세계서핑리그(World Surf League, WSL) 대회 유치 등을 통해 해양레저·기술·관광이 결합된 대표적 복합 인프라 사례로 평가된다(송훈희, 2024; 이영진, 송영민, 2012).

이와 같은 해양수상레저 활동의 양적·질적 확대는 수상레저 기구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기존의 모터보트·요트 중심 활동에서 벗어나 서프보드, SUP, 카약 등 개인형 레저기구는 장소·비용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진입장벽을 통해 대중화를 견인하고 있으며(김엘진, 2023; 해양경찰청, 2023), 전동 포일(E-Foil), 전동 서프보드(E-Surfboard), 전동 수상자전거, 플라이보드(Flyboard) 등 신기술 기반 기구는 차별화된 체험을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고 있다(신재우, 2023; Royal Yachting Association, 2021). 나아가 IoT와 AI 기술이 접목된 스마트 보드, GPS 추적 시스템, AI 기반 안전구조 지원 시스템, 스마트 안전 헬멧 및 구명조끼 등은 이용자의 안전성과 편의성을 제고하고 있으며(박해림, 2022), 친환경 전동화 장비는 탄소중립과 해양 환경 보호 관점에서 중요한 산업적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강남선, 김남훈, 2013; 서용석, 2021). 이처럼 해양수상레저 기구산업은 단순한 장비 제조·유통 수준을 넘어 기술·환경·안전·문화가 결합된 복합 산업으로 전환되고 있다.

다만 국내 해양수상레저 기구산업은 아직 기술 혁신이 곧바로 시장 확대와 산업 성장으로 연결될 만큼 충분한 제도적 수용 환경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신기술과 친환경 기술은 중요한 잠재 요인이지만, 현 단계에서는 이러한 기술이 실제 시장에서 수용될 수 있도록 체험 인프라, 이용자 문화, 인증 및 제도적 기반이 함께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성장 잠재력에 비해 제도·인프라·인력 측면의 구조적 한계는 여전히 뚜렷하다. 우선, 공기

주입식 보드나 전동 서프보드와 같이 사용 목적과 위험 수준이 상이한 기구들이 「수상레저 안전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등 여러 법령에서 ‘물놀이기구’와 ‘레저장비’ 사이에 모호하게 위치하면서, 동일한 기구가 법령에 따라 상이한 규제와 인증 기준을 적용받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지승현, 2024). 더불어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해양경찰청 등 여러 부처에 의한 중첩 관리의 안전 기준, 인증 제도, 통계 체계를 분절적으로 운영하게 하며, 일부 신종 기구는 규제 사각지대에 놓이거나 반대로 과도한 규제에 의해 시장 진입이 제한되는 이중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지민준, 2022). 최근 해양경찰청(2023)이 ‘수상레저기구 안전인증 기술기준 개발 및 안전인증시스템 구축’ 과제를 추진하는 것 역시 신종 기구 등장에 비해 제도적 대응 속도가 뒤처져 있음을 방증한다.

인프라와 전문 인력 측면 역시 주요 제약 요인으로 지적된다. 해변·강·호수 인근의 샤워실, 장비 거치·보관 시설, 수리·정비 공간 등 인프라라는 일부 인기 관광지를 제외하면 여전히 부족하며, 장비 사용 후 유지·보수와 재사용을 지원하는 구조 역시 미흡하다(김엘진, 2023; 박명국, 김성규, 2002). 실제로 부산 수영구 광안리 해수욕장이 샤워실과 보드 거치대 설치 후 이용객 증가와 만족도 향상을 경험한 사례는 인프라 개선이 해양레저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을 잘 보여준다(김엘진, 2023). 그럼에도 다수 지역에서는 인프라 부족으로 인해 해양수상레저 기구 이용 환경이 제한적이며, 강사·안전요원·정비 및 운영 전문가 등 전문 인력 양성 체계도 충분히 구축되지 못한 상황이다(김인, 이현경, 2020; 김충환, 2023). 특히 신기술·신기구 환경을 반영한 교육과정과 자격 인증 제도가 미흡하여, 기술·시장 변화 속도에 비해 인력 기반이 뒤처질 우려가 존재한다.

한편, 기존 학술 연구의 흐름을 살펴보면, 해

양수상레저 분야는 주로 안전관리 체계 및 법적 제적 쟁점, 해양레저 관광 및 마리나 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연계 가능성, 여가만족과 참여 동기 등을 중심으로 논의되어 왔다(김설향, 신아름, 황선환, 2012; 유예지, 김주락, 2024). 최근에는 스마트 해양레저 관광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전략 요인의 중요도를 AHP로 분석한 연구(조우정, 유영동, 장다혜, 2025), 전동형 서프보드 등 친환경 신기술 기구의 산업적 가능성을 제시한 연구 등 기술·환경 변화를 반영하려는 시도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다수 연구는 특정 영역(법제, 안전, 관광, 개별 종목)에 국한되어 있으며, 정책·제도, 인프라, 기술, 인력, 문화·홍보 등 다양한 요인을 ‘해양수상레저 기구산업’이라는 단일 프레임 속에서 통합적으로 구조화하고, 이들 요인 간 상대적 중요도와 우선순위를 계량적으로 제시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아울러 수상레저 기구 자체의 산업 구조와 활성화 전략을 독립적 분석 단위로 설정한 연구도 제한적이다.

이상을 종합하면, 해양수상레저 기구산업은 국민 소득 및 여가시간 증가, 해양레저관광 수요 확대, 스마트·친환경 기술 도입, 정부의 정책적 관심 확대 등 외부 환경 변화 속에서 높은 성장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해양수산부, 2019, 2025; UNWTO, 2023). 그와 동시에 다 부처에 걸친 분절적 규제 체계, 기구 분류·인증 기준의 모호성, 기반 인프라와 전문 인력의 부족, 기구산업에 대한 체계적 통계와 연구의 부재 등 구조적 한계도 공존하고 있다(김경민, 2015; 박명국, 김성규, 2002; 지민준, 2022). 이러한 배경에서 해양수상레저 기구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개별 현안에 대한 부분적 논의를 넘어, 산업 전반을 구성하는 핵심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도출·분류하고, 이들 간 상대적 중요도와 우선순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전략 연구가 요청된다. 본 연구에서 정의하는 해양수상레저 기구산업은

수상레저 활동에 사용되는 기구의 제조, 수입, 유통, 안전인증, 유지관리 및 관련 서비스 산업을 중심으로 한다. 관광산업 및 문화산업은 독립적인 산업영역으로 볼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해양수상레저 기구산업의 수요 형성과 활성화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 환경요인으로 한정하여 분석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해양 및 내수면에서 사용되는 동력·무동력 수상레저 기구 전반을 포괄하는 '해양수상레저 기구산업'을 연구 대상으로 정의하고, 문헌 연구와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산업 활성화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을 정책 및 제도, 인프라 구축 및 개선, 기술 개발 및 혁신, 인적 자원 양성 및 전문화, 문화 저변 확대 및 홍보 등으로 구조화한 후, 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 기법을 적용하여 이들 요인의 상대적 중요도와 우선순위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해양수상레저 기구산업의 전략적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정부·지자체·산업계·학계 및 연구기관 등과 이해관계자의 정책 및 의사결정에 활용 가능한 실증적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데 학문적·실천적 의의가 있다. 이러한 연구 목적 달성을 위하여 본 연구에서 설정한 구체적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해양수상레저 기구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주요 요인은 무엇인가?

둘째, 해양수상레저 기구산업 활성화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인과 그 우선순위는 무엇인가?

셋째, 해양수상레저 기구산업 활성화를 위해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어떤 전략적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참여자

본 연구는 해양수상레저 기구산업의 활성화

전략을 도출하기 위해, 산업·정책·학술 분야의 경험을 균형 있게 반영할 수 있는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하였다. 전문가 선정 기준은 해양수상레저 분야에서 10년 이상 실무 또는 연구 경험을 보유한 인물로 설정하였다.

초기 참여자는 연구자의 산업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선정하였으며, 이후 스노우볼 샘플링 (snowball sampling)을 통해 집단을 확장하였다. 최종적으로는 산업계 실무자, 공공기관 종사자, 학계 전문가, 기구 사용자(선수 및 소비자), 관련 협회·단체 관계자 등이 포함되었다. 이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관점을 반영하여 AHP 분석의 내용 타당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였다.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전문가 인터뷰 정보

ID	전문 분야	구분	종사 기간
A	지자체 주무관 (해양레저 분야 박사)	기관	20년 이상
B	파워보트연맹 회장 (제트스키)	기관	20년 이상
C	한국제품안전관리원 (기구안전인증)	기관	5년 이상
D	해양교통안전공단 (선임검사원)	기관	15년 이상
E	수상레저업 대표 (시설 및 교육)	산업	20년 이상
F	스포츠레저 전공 교수	기관	15년 이상
G	서핑협회장	기관	20년 이상
H	패들보드 협회장	산업	10년 이상
I	웨이크보드 선수	산업	15년 이상
J	수상스키 선수	산업	15년 이상
K	레저기구 제조업 대표 (제트스키 및 신종 기구)	산업	15년 이상

2. 연구절차

본 연구는 해양수상레저 기구산업의 활성화 전략을 도출하기 위해 문헌 연구, 전문가 인터뷰, AHP 분석의 3단계 절차로 수행되었다.

첫째, 문헌 연구를 통해 산업 활성화와 관련된 기존 연구 및 산업 동향을 검토하고 규제, 안전성, 인증 기준, 사회문화적 환경, 기술적 요인 등을 분석하여 초기 요인을 도출하였다.

둘째, 전문가 인터뷰를 실시하여 문헌 연구에서 도출된 요인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산업 현장에서 요구되는 추가 요인을 탐색하였다.

문헌 연구를 통해 도출된 예비 요인들은 전문가 인터뷰 과정에서 재검토하였으며, 유사한 의미를 갖는 요인들은 통합하고, 서로 다른 상위 범주에 동시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요인들은 전문가 협의를 통해 배치하였다. 그 결과 정책 및 제도 기반 구축, 인프라 구축 및 개선, 기술 개발 및 혁신, 인적 자원 양성 및 전문화, 문화 저변 확대의 5개 상위 요인과 20개 세부 요인이 최종 도출되었다. 또한 AHP 분석의 특성을 고려하여 각 상위 요인은 상호 독립적인 전략 영역으로 구성하였다. 비록 실제 산업 환경에서는 정책이 인프라 구축에 영향을 미치고, 인프라가 문화 활성화에 영향을 미치는 등 상호 연계성이 존재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산업 활성화 전략 수립을 위한 우선순위 도출에 초점을 두고 각 영역을 독립적인 단위로 구분하였다.

셋째,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AHP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은 요인 간 상대적 중요도를 평가하는 쌍대비교 방식을 활용하였으며, 이를 통해 해양수상레저 기구산업 활성화 요인의 우선순위를 도출하였다. AHP 설문조사 참여자는 해양수상레저 관련 산업체 종사자, 공공기관 관계자, 학계 전문가 및 관련 협회·단체 관계자 등으로 구성하였다. 인터뷰 참여자 11명은 요인 도출 및 계층구조 설계를 위한 전문

가 집단으로 활용되었으며, AHP 설문은 별도의 전문가 집단을 포함한 총 32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일부 인터뷰 참여자는 AHP 설문에도 참여하였으나, 두 집단은 동일하게 구성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 활용된 AHP 모형은 문헌 연구와 전문가 인터뷰를 기반으로 요인을 구조화하고, 평가 기준과 내용을 명확히 제시하여 전문가가 동일한 기준에서 평가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연구 설계 및 절차와 관련된 내용은 다음 <표 2>, <그림 1>과 같다.

3. 자료처리

본 연구는 연구 목적 달성을 위해 AHP 분석 방법을 적용하였으며, 해양수상레저 분야 전문가를 대상으로 수집한 설문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분석에는 AHP 및 ANP 분석을 지원하는 의사결정 소프트웨어인 Super Decisions를 사용하여 요인 간 상대적 중요도와 우선순위를 산출하였다.

최종 회수된 34부의 응답에 대해 논리적 일관성(Consistency Index, CI)과 일관성 비율(Consistency Ratio, CR)을 산출하여 응답의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AHP 분석에서는 일반적으로 CR이 0.1 이하일 때 일관성이 확보된 것으로 판단하며, 사회과학 분야에서는 0.2까지 허용 가능한 기준으로 활용된다. 본 연구에서는 CR이 기준을 초과한 2부를 제외하고, 총 32부의 응답을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4. 연구의 진실성 및 윤리성

본 연구는 수상레저 기구산업 활성화를 위한 주요 요인을 도출하고 AHP 분석을 위한 요인 구조를 정교화하기 위해 전문가 인터뷰

표 2. 연구 설계

연구 절차	세부 절차 및 내용	
연구 목적 및 연구 대상 구체화	- 한국 해양수상레저 기구산업 현황 파악 및 이슈 도출 - 연구목적 및 범위 구체화 및 연구 방향 설계	
	문헌 조사	연구 방향 설정
	해양수상레저 기구 현황 자료 조사 선행 연구 조사	자료 분석 및 선행 연구 분석 해양수상레저기구산업 현안 파악
문헌 연구 및 조사 설계	- 선행연구 분석을 통한 1차 요인 도출 및 심층 인터뷰 질문지 구성 -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토대로 심층 인터뷰 수행	
	문헌 조사	심층인터뷰
	해양수상레저 활성화 요인 1차 도출	해양수상레저 기구산업 활성화 요인 구조화
AHP 모델 설계 확정 및 전문가 설문	- AHP 모델 설계 및 구조화: 심층 인터뷰 결과 분석을 바탕으로 수상레저 기구산업 활성화 조건 범주화 - 산업 및 관련 기관 종사자 집단, 정부(해양, 수상레저 관련 협회, 기관 등) 대상으로 AHP 설문 조사 수행	
AHP 분석 및 결과 도출	- AHP 설문조사 데이터 분석 및 주요 요인의 우선순위 도출	
발전 전략 및 시사점 도출	- 우선순위를 바탕으로 시사점 도출 및 수상레저 기구산업 활성화 전략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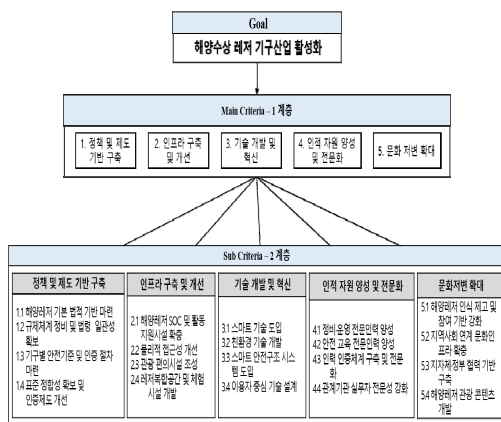


그림 1. 해양수상레저 기구산업 활성화 계층 모형

를 수행하였다. 인터뷰는 1:1 대면을 원칙으로 하였으나, 일정상 대면이 어려운 경우 전화, 이메일, 메신저 등을 활용한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평균 소요 시간은 약 1시간이었으며, 필요 시 후속 연락을 통해 요인 검증 및 AHP 모델 설계 관련 추가 의견을 수렴하였다.

연구자는 인터뷰 초기 라포(rapport) 형성을

통해 신뢰를 구축하고 참여자의 응답 환경을 조성하였다. 인터뷰 자료는 녹음과 필기를 통해 수집한 후 전사하여 주제별로 정리하였으며, 반복적으로 언급된 내용을 중심으로 주요 요인을 식별하였다. 이러한 자료는 AHP 모델의 계층 구조 설계에 활용되었으며, 새로운 요인이 더이상 등장하지 않는 시점에 인터뷰를 종료하였다.

연구 윤리 확보를 위해 모든 절차는 참여자의 자발적 동의를 기반으로 진행되었다. 연구 목적과 자료 활용 방식은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였으며, 참여자는 언제든지 인터뷰를 중단하거나 거부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참여자의 동의하에 확보되었고, 녹음 여부 역시 사전에 고지하였다. 인터뷰 자료는 연구 목적 외에는 사용되지 않으며, 모든 개인정보와 응답 내용은 익명 처리하여 외부 유출을 방지하였다. 인터뷰 일정은 참여자의 편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조율하였으며, 이러한 윤리적 절차를 통해 연구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III. 결과

1. 전문가 인터뷰 결과

본 연구는 문헌 연구에서 도출한 예비 요인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현장에서 체감되는 제약 요인과 개선 과제를 보완·구체화하기 위해 해양수상레저 관련 정책 담당자, 산업 종사자, 안전·인증 기관, 학계 전문가 등 11명을 대상으로 반구조화된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해양수상레저 기구산업 활성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정책 및 제도 기반 구축’, ‘인프라 구축 및 개선’, ‘기술 개발 및 혁신’, ‘인적 자원 양성 및 전문화’, ‘문화 저변 확대’의 다섯 상위 범주와 20개의 세부 요인으로 구조화되었다. 인터뷰 결과는 AHP 분석의 계층 구조화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었으며, 각 범주별 핵심 요인의 도출에 있어 중요한 이론적·현장적 타당성을 제공하였다. 다섯 가지 상위 범주를 중심으로 전문가들이 제시한 주요 견해와 요인을 <표 3>과 같이 도출하였다.

표 3. 전문가 인터뷰 결과

구분	주요 요인(응답자 ID)
정책 및 제도	- 해양레저 기본 법적 기반 마련 (A, C, H, K)
	- 규제체계 정비 및 법령 일관성 확보 (A, C)
	- 기구별 안전기준 인증 및 절차 보완 (C, E, F)
	- 표준 적합성 확보 및 인증제도 개선 (C, D, G)
인프라 구축	- 해양레저 SOC 확충(A, B, E)
	- 물리적 접근성 개선(D, E)
	- 관광 편의 부대시설 조성(A, E, I, J)
	- 레저 복합공간 및 체험시설 개발(D, I)
기술 개발 및 혁신	- 스마트 기술 도입(F, D, G)
	- 친환경 기술 개발(F, D, E)
	- AI 안전구조 시스템 도입(D, H)
	- 이용자 중심 설계(E, C, K)

인적 자원 전문화	- 정비운영 전문인력 양성(A, E)
	- 안전 교육 전문인력 양성(A, D)
	- 인력 인증체계 구축 및 전문화 (A, D, I, K)
	- 관계부처 및 기관 전문성 강화(F, G)
문화 및 저변 확대	- 해양레저 인식 제고 및 참여 기반 강화 (A, F, G)
	- 지역사회 연계 문화인프라 확충(E, G)
	- 지자체 정부 협력 기반 구축(B, C, G)
	- 해양수상레저 관광콘텐츠 개발 (A, B, E, G)

1) 정책 및 제도

정책 및 제도 기반 구축 영역에서 전문가들은 현행 법·제도가 산업 변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으며, 동일 기구가 ‘물놀이기구’와 ‘레저장비’ 사이에서 모호하게 분류되는 등 제도 간 불일치가 현장 혼란을 초래한다고 공통적으로 지적하였다.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역량과 이해도 부족, 부처 간 상이한 해석, 국제 기준과의 괴리 등도 반복적으로 언급되었다. 한 지자체 해양레저 정책 담당 주무관(A)은 다음과 같이 현행 제도의 후행성을 비판하였다.

“다 유행하고 나서 그다음 법이 개정되고, 또 그다음 법이 개정되고… 한 발짝씩 늦다는 건 이 산업 환경과 트렌드를 지자체나 정부에서 정확하게 읽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규제 혁신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A).”

이러한 인식은 해양레저 관련 법체가 산업 변화와 신기술 도입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기존 연구의 지적과도 맥을 같이 한다(김인, 이현경, 2020; 이기춘, 2024; 지민준, 2022). 전문가들은 규제체계 정비와 법령 간 일관성 확보, 기구별 안전기준 및 인증 절차 마련, 국제표준과의 정합성 제고, 해양레저 기본법과 같은 상위 법적 기반 구축을 정책·제도 영역의 핵심 과제로 제시하였다.

2) 인프라구축 및 개선

인프라 구축 및 개선에 대해서는 도시형 SOC와 레저 복합공간의 확충이 산업 활성화의 전제 조건이라는 인식이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일부 지역(예: 광안리, 양양 등)은 장비 보관소, 샤워장, 탈의실, 체험센터 등 기본 인프라를 갖추어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지만, 다수의 수역에서는 체험이 가능한 물리적 환경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기반시설 부재로 체험 프로그램 운영이 어려운 실정임이 지적되었다.

“양양은 서핑, 광안리는 SUP처럼, 지역마다 자연 환경과 이용자 특성에 맞는 종목 중심 인프라 개발이 효과적이다. 산업 지속가능성은 결국 지역성과 연결되어서 브랜딩되어야 합니다(B).”

이는 해양레저 SOC 확충과 복합단지 조성이 산업 활성화에 필수적이라고 본 기존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김엘진, 2023; 이영진, 송영민, 2012). 전문가들은 지역별 자연환경과 수요 특성을 반영한 종목 특화형 인프라 전략, 성수기 중심 운영 구조를 보완하는 사계절형·실내형 체험시설, 대도시 인근 접근성 제고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3) 기술 개발 및 혁신

기술 개발 및 혁신 영역에서 전문가들은 전동보트, 전동포일, 스마트 구조장비 등 신기술 기반 기구가 빠르게 확산되는 현실을 강조하였다. 스포츠레저 전공 교수(F)는 자율주행 기능이 탑재된 전동보트, GPS·구조 시스템, 드론 구조기술 등이 통합된 장비와 스웨덴 전기보트 기업 캔델라(Candela) 사례를 예로 들며, 이러한 방향성이 향후 해양수상레저 기구산업이 지향해야 할 기술 혁신의 모델이라고 평가하였

다. 이는 친환경·전동화 기술과 스마트 안전기술을 해양레저산업의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제시한 선행연구와도 연결된다(서용석, 2021; 신재우, 2023). 다만 전문가들은 기술 발전이 제도적 뒷받침 없이 진행될 경우, 오히려 규제와 인증체계의 한계로 인해 시장 진입이 가로막히는 역설적 상황이 발생한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기술 개발 및 혁신 영역에서는 스마트 안전·구조 시스템과 이용자 중심 설계, 친환경 전동화 기술 개발과 더불어, 기술 발전 속도를 반영한 제도 정비와 기술 표준화가 병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4) 인적 자원 전문화

인적 자원 양성 및 전문화와 관련해서는 강사·정비사·안전요원 등 핵심 인력의 전문성이 산업 신뢰성과 직결됨에도, 체계적인 교육·자격·재교육 시스템이 부재하다는 점이 공통된 문제로 지적되었다. 현장에서는 경험 연차만으로 ‘전문가’로 인정되는 관행이 지속되고 있으며, 유소년·여성·시니어 등 이용자 특성에 따른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도 부족한 상황이다. 이는 수상레저 안전교육과 전문 인력 양성의 미비를 지적한 선행연구와도 일맥상통한다(성보현, 2010; 이세환, 2020; 조승준, 2016). 전문가들은 국가 공인 자격체계 확립, 정기적 역량 갱신제 도입, 현장 실무 중심의 교육과정 설계, 관계기관 실무자의 전문성 강화 등을 인력 분야의 우선 과제로 제시하였다.

5) 문화 및 저변 확대

문화 저변 확대 영역에서는 해양수상레저 활동에 대한 국민 인식 개선과 참여 기반 확대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일부 기성세대가 수상레저를 ‘위험한 활동’으로 인식하는 경향, 안전사고 보도의 편향성, 제도에 대한 불신 등은 산

업 성장에 부정적 요인이 되고 있었다. 해양레저 정책 담당 주무관(A)은 기성세대의 부정적 인식과 세대 간 인식 차이를 고려할 때, 감성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스포츠 콘텐츠와 SNS 기반 홍보 전략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는 해양레저의 경제적·관광적 가치뿐 아니라 인식 개선과 문화 확산 전략을 증시한 연구 결과와도 일치한다(김정태, 2021; 유예지, 김주락, 2024). 전문가들은 SNS와 스포츠 콘텐츠를 활용한 MZ세대 대상 감성적 홍보, 지역사회와 연계한 생활밀착형 프로그램 및 지역 대회 운영, 공공기관-지자체-민간이 협력하는 통합 홍보 체계, 해양레저 관광 콘텐츠와 연계된 문화 인프라 구축 등을 문화 저변 확대의 핵심 방향으로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전문가 인터뷰 결과는 해양수상레저 기구산업이 제도, 인프라, 기술, 인력, 문화가 상호 연계된 복합 산업이라는 점을 확인시켜 주었으며, 이후 AHP 계층모형 구성과 설문 문항 도출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었다.

2. AHP 분석 결과

1) 상위 요인의 우선순위

AHP 분석을 통해 해양수상레저 기구산업 활성화에 대한 다섯 상위 요인의 상대적 중요도를 산출한 결과는 <표 4>와 같으며, ‘문화 저변 확대’가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도출되었다.

표 4. 상위 요인 우선순위 분석 결과

상위요인	CR	가중치	우선순위
정책 및 제도 기반 구축	0.0021	0.2150	3
인프라 구축 개선		0.2498	2
기술 개발 및 혁신		0.1061	5
인적 자원 양성 및 전문화		0.1742	4
문화 저변 확대		0.2548	1

다음으로 ‘인프라 구축 및 개선’(0.2498), ‘정책 및 제도 기반 구축’(0.2150), ‘인적 자원 양성 및 전문화’(0.1742), ‘기술개발 및 혁신’(0.1061) 순으로 나타났다.

상위 요인 비교에 대한 일관성 비율(CR)은 0.0021로 0.1 이하의 기준을 충분히 만족하여 응답의 일관성이 확보되었다.

CR 값이 매우 낮게 나타난 것은 해양수상레저 기구산업의 주요 현안에 대해 전문가 집단 간 인식 차이가 크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낮은 CR 값은 설문 구조의 단순성보다는 전문가 집단 내 인식의 수렴 정도가 높았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해양수상레저 기구산업이 단순 장비·기술 중심이 아니라, 문화적 수요 기반과 체험기회의 확대가 선행되어야 하는 산업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다시 말해, 국민 인식과 참여 기반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제도 정비나 기술 혁신이 이루어지더라도 실질적인 시장 확대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2) 세부 요인의 우선순위

상위 요인별 네 개씩, 총 20개의 세부 요인에 대한 우선순위 분석 결과는 다음의 <표 5>와 같이 요약된다.

정책 및 제도 기반 구축에서는 ‘규제체계 정비 및 법령 일관성 확보(0.2697)’가 가장 중요한 세부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어 ‘표준 정합성 확보 및 인증제도 개선(0.2534)’, ‘기구별 안전 기준 및 인증 절차 마련(0.2453)’, ‘해양레저 기본 법적 기반 마련(0.2317)’ 순으로 도출되었으며, CR은 0.0020으로 양호하였다. 이는 범·제도의 양적 확충보다는 기존 제도의 일관성과 정합성을 높이는 작업이 우선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인프라 구축 및 개선에서는 ‘레저 복합공간 및 체험시설 개발(0.3179)’이 최상위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해양레저 SOC 및 활동지원시설 확충(0.2690)’, ‘관광 편의시설 조성(0.2352)’, ‘물리적 접근성 개선(0.1780)’이 뒤를 이었다(CR=0.0028). 이는 단순한 장비 대여 시설을 넘어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복합공간의 조성이 산업 활성화에 결정적임을 보여준다.

기술 개발 및 혁신에서는 ‘이용자 중심 기술 설계(0.3952)’가 가장 중요하게 평가되었고, ‘스마트 안전구조 시스템 도입(0.2952)’, ‘스마트 기술 도입(0.1849)’, ‘친환경 기술 개발(0.1247)’ 순으로 나타났다(CR=0.0053). 이는 기술 자체보다 사용자 경험과 안전, 현장 적용성을 중심에 둔 기술 개발이 우선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인적 자원 양성 및 전문화에서 ‘정비·운영 전문인력 양성(0.2762)’이 가장 높은 가중치를 보였으며, ‘관계기관 실무자 전문성 강화(0.2703)’, ‘안전 교육 전문인력 양성(0.2578)’, ‘인력 인증체계 구축 및 전문화(0.1957)’ 순으로 나타났다(CR=0.0011). 즉, 장비 정비·운영과 행정·안전 실무를 책임질 핵심 인력의 역량 강화가 산업 신뢰성 확보의 출발점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문화 저변 확대에서는 ‘지역사회 연계 문화 인프라 확충(0.2855)’이 1순위, ‘해양레저 관광 콘텐츠 개발(0.2591)’, ‘지자체·정부 협력 기반 구축(0.2503)’, ‘해양레저 인식 제고 및 참여 기반 강화(0.2052)’ 순으로 도출되었다(CR=0.0033). 이는 단순 홍보를 넘어 지역사회와 연계된 문화 인프라와 관광 콘텐츠, 공공부문 간 협력 구조가 해양레저 문화 확산의 핵심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3) 종합 가중치 분석

상위 요인과 세부 요인의 가중치를 곱하여 산출한 20개 세부 요인의 종합 가중치를 살펴

보면, ‘레저 복합공간 및 체험시설 개발(0.0794)’이 전체 1순위로 나타났다. 이어 ‘지역사회 연계 문화인프라 확충(0.0727)’, ‘해양레저 SOC 및 활동지원시설 확충(0.0672)’, ‘해양레저 관광 콘텐츠 개발(0.0660)’, ‘지자체·정부 협력 기반 구축(0.0638)’ 등이 상위권에 위치하였다.

반대로, ‘친환경 기술 개발(0.0132)’, ‘스마트 기술 도입(0.0196)’, ‘스마트 안전구조 시스템 도입(0.0313)’ 등 기술 관련 요인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순위를 차지하였다. 이는 현재 산업 이해관계자들이 단기적·실질적 효과가 기대되는 공간·문화·제도 기반의 요인을 우선적으로

표 5. 종합 가중치 분석 결과

1계층 (상위요인)	2계층 (세부요인)	중합 중요도	전체 순위	
1. 정책 및 제도 기반 구축	1.1 해양레저 기본 법적 기반 마련	0.2317	0.0498	11
	1.2 규제체계 정비 및 법령 일관성 확보	0.2697	0.0580	7
	1.3 기구별 안전기준 및 인증 절차 마련	0.2453	0.0527	9
	1.4 표준 정합성 확보 및 인증제도 개선	0.2534	0.0545	8
2. 인프라 구축 및 개선	2.1 해양레저 SOC 및 활동지원시설 확충	0.2690	0.0672	3
	2.2 물리적 접근성 개선	0.1780	0.0445	15
	2.3 관광 편의시설 조성	0.2352	0.0588	6
	2.4 레저복합공간 및 체험시설 개발	0.3179	0.0794	1

1계층 (상위요인)	2계층 (세부요인)	종합 중요도	전체 순위
3. 기술 개발 및 혁신	3.1 스마트 기술 도입	0.1849	0.0196 19
	3.2 친환경 기술 개발	0.1247	0.0132 20
	3.3 스마트 안전구조 시스템 도입	0.2952	0.0313 18
	3.4 이용자 중심 기술 설계	0.3952	0.0419 16
4. 인적 자원 양성 및 전문화	4.1 정비·운영 전문 인력 양성	0.2762	0.0481 12
	4.2 안전 교육 전문인력 양성	0.2578	0.0449 14
	4.3 인력 인증체계 구축 및 전 문화	0.1957	0.0341 17
	4.4 관계기관 실무자 전문성 강화	0.2703	0.0471 13
5. 문화 저변 확대	5.1 해양레저 인식 제고 및 참 여 기반 강화	0.2052	0.0523 10
	5.2 지역사회 연계 문화인프라 확충	0.2855	0.0727 2
	5.3 지자체·정부 협력 기반 구축	0.2503	0.0638 5
	5.4 해양레저 관광 콘텐츠 개발	0.2591	0.0660 4

인식하고 있으며, 기술 혁신은 중요하지만 제도적 수용성과 시장 성숙도 측면에서 아직 상대적으로 후순위에 머물러 있음을 보여준다.

요약하면, 본 연구의 AHP 분석 결과는 해양수상레저 기구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체험 중심의 복합 공간과 SOC 확충, 지역사회와 연계된 문화 인프라 조성, 관광 콘텐츠 개발, 공공부문 협력 기반 강화 등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뒷받침하는 규제체계 정비와 인력 전문화가 병행될 필요가 있음을 경험적으로 제시한다.

4) 집단 간 우선순위 비교

마지막으로, 산업 전문가 집단과 학계·공공기관 집단의 응답을 분리하여 분석한 결과, 두 집단 간 인식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산업 전문가들은 상위 요인 가운데 ‘문화 저변 확대(0.3040)’와 ‘인프라 구축 및 개선(0.2432)’을 상대적으로 더 중시하였으며, 세부 요인에서는 ‘지역사회 연계 문화인프라 확충(0.0846)’, ‘레저 복합공간 및 체험시설 개발(0.0826)’, ‘지자체·정부 협력 기반 구축(0.0794)’, ‘해양레저 관광 콘텐츠 개발(0.0769)’을 최상위 요인으로 평가하였다. 이는 현장에서는 이용자 체험과 문화적 수요, 공간 인프라가 곧 매출과 직결되는 현실이 강하게 반영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 학계 및 기관 종사자 집단에서는 ‘정책 및 제도 기반 구축(0.2771)’이 가장 중요한 상위 요인으로 도출되었고, 세부 요인에서도 ‘규제체계 정비 및 법령 일관성 확보(0.0883)’, ‘해양레저 SOC 및 활동지원시설 확충(0.0869)’, ‘기구별 안전기준 및 인증 절차 마련(0.0756)’ 등이 상위권에 위치하였다. 이는 제도권에서는 법·제도의 안정성과 체계적 인프라 조성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강하게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와 같이 집단별 우선순위 비교 결과는 향후 정책 수립 과정에서 산업 현장의 수요(문화·

체험·공간 중심)와 제도권의 관점(법·제도·안전 중심)을 상호 보완적으로 조정하는 거버넌스 설계가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하며, 이해관계자 간 협의 구조와 소통 메커니즘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IV. 논의

본 연구는 해양수상레저 기구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전략적으로 우선되어야 하는 요인을 규명하고자, 선행연구를 통해 도출한 다섯 개 상위 요인(정책·제도, 인프라, 기술, 인력, 문화)을 중심으로 전문가 인터뷰와 AHP 분석을 수행하였다. 구체적으로, 반구조화된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각 요인의 타당성과 현장의 체감 문제를 파악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5개 상위 요인과 20개 세부 요인을 확정하였다. 이후 AHP를 통해 상·하위 요인의 상대적 중요도와 종합 우선순위를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상위 요인 분석에서 '문화 저변 확대'가 가장 높은 중요도(0.2548)를 나타냈다는 점은 해양수상레저 기구산업이 본질적으로 수요 기반 산업임을 보여준다. 수상레저 활동에 대한 국민 인식은 여전히 '위험하다', '나와는 거리가 있는 활동'이라는 이미지에 머물러 있으며, 실제 체험 기회도 특정 지역과 계층에 편중되어 있다. 한 정책 담당 주무관은 "기성세대는 수상레저를 위험한 활동으로 인식해요. 그래서 감성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스포츠 콘텐츠 등 SNS 홍보가 중요합니다(A)"라고 언급하며, 인식 개선과 경험 확장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는 해양레저 활동을 친숙하고 매력적인 여가로 인식하게 하는 문화적 기반 조성이 장비 공급이나 기술 도입보다 우선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AHP 결과에서 문화 영역의 세부 요인 중 '지역사회 연계 문화인프라 확충', '해양

레저 관광 콘텐츠 개발', '지자체·정부 협력 기반 구축' 등이 상위권에 위치한 것은, 단순한 정보 제공이나 일회성 홍보를 넘어 지역 문화·관광과 결합된 복합적 체험 구조가 수요 확대의 핵심임을 뒷받침한다(김정태, 2021). 최근 김포 아라마린페스티벌과 같은 도심형 해양레저 축제는 수상레저 체험을 지역 축제와 결합하여 일반 시민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사례로 볼 수 있다(연합뉴스TV, 2026). 이는 지역 사회 연계 문화인프라와 체험형 관광 콘텐츠가 해양수상레저 기구산업의 수요 기반 형성에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본 연구에서 문화 저변 확대가 가장 높은 중요도로 도출된 결과는 기존 해양레저 연구와 차별성을 갖는다. 기존 연구들은 안전관리 체계, 관광 활성화, 법제도 개선 등을 중심으로 접근한 반면, 본 연구는 해양수상레저 기구산업이 공급 중심 산업이 아닌 수요 기반 산업이라는 점에 주목하였다. 이는 산업 발전의 선행조건이 기술 혁신이나 장비 공급 확대가 아니라 실제 참여자 기반의 형성이라는 점을 의미하며, 해양수상레저 기구산업이 아직 시장 형성 단계에 있음을 보여준다. 아무리 우수한 장비와 기술이라도 실제 이용자와 참여 문화가 형성되지 않는다면 산업 성장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는 기술 혁신 자체보다 국민 인식 개선, 체험 기회 확대, 지역사회 기반의 문화 형성 즉, 문화 저변 확대에 의한 대중화가 산업 성장의 매우 필수적인 선결조건이라 해석할 수 있다.

둘째, 상위 요인 2순위로 나타난 '인프라 구축 및 개선'과 종합 가중치 1순위 세부 요인인 '레저복합공간 및 체험시설 개발(0.0794)'의 결과는 해양수상레저 기구산업의 성장이 공간과 시설 인프라에 크게 의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해변·내수면·도심 수역 등 물리적 환경은 이미 존재하지만, 장비 보관소, 샤워·탈의 시설, 체험센터, 주차·편의시설과 같은 기본 인프라

라가 부족하여 실제 체험 프로그램 운영이 어려운 지역이 여전히 많다는 점이 전문가 인터뷰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었다. 한 협회장은 "양양은 서핑, 광안리는 SUP처럼, 지역마다 자연 환경과 이용자 특성에 맞는 종목 중심 인프라 개발이 효과적이다. 산업 지속가능성은 결국 지역성과 연결되어서 브랜드되어야 합니다(B)"라고 언급하며, 인프라 전략이 단순 시설 확충이 아니라 지역 특성과 결합된 종목 특화형·브랜드 전략으로 전개되어야 함을 지적하였다. 실제로 웨이브파크와 같은 복합 해양레저 테마파크가 서핑 종목의 대중화와 장비 수요 확대에 긍정적 역할을 수행했다는 사례는(송훈희, 2024), '레저복합공간 및 체험시설 개발'이 이용자 편의 차원을 넘어 해양수상레저 기구산업 전반을 견인하는 거점 전략임을 시사한다.

셋째, '정책 및 제도 기반 구축'이 상위 요인 3위(0.2150)로 나타났고, 그중 '규제체계 정비 및 법령 일관성 확보'와 '표준 정합성 확보 및 인증제도 개선'이 높은 가중치를 보인 결과는, 현재 제도 환경이 산업 활성화의 병목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전문가 인터뷰에서 KC 인증 기준의 모호성, 부처 간 상이한 해석, 신종 기구에 대한 분류 부재 등 제도의 후행성이 반복적으로 지적되었으며, 동일한 기구가 '물놀이기구'와 '레저장비' 사이에서 법령에 따라 다른 규제를 적용받는 현실이 현장 혼란과 불확실성을 증폭시키고 있음이 확인되었다(김인, 2020; 지민준, 2022). 아울러 일부 전문가는 "친환경 전동 장비임에도 기존 부속서 기준 때문에 리콜이나 금지 조치를 받는 경우가 있다"고 언급하며, 기술 발전과 제도 간 간극이 산업 혁신을 제약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AHP 결과는 이러한 문제 인식을 계량화한 것으로,¹² 정책·제도 요인이 최상위 우선순위는 아니지만 산업의 예측 가능성과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 반드시 정비되어야 할 필수 기반임을 나타낸다.

넷째, '인적 자원 양성 및 전문화'는 상위 요인 4위로 나타났으나, 세부 요인에서 '정비·운영 전문인력 양성', '관계기관 실무자 전문성 강화', '안전 교육 전문인력 양성' 등이 모두 중상위에 위치한 점은 해양수상레저 기구산업에서 전문 인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현장에서는 경력 연차만으로 '전문가'로 간주되는 관행, 유소년·여성·시니어 등 다양한 수요자를 고려한 맞춤형 교육 부재, 국가 공인 자격과 재교육 체계의 미비 등 인력 양성 시스템의 한계가 반복적으로 지적되었다. 한 레저업체 운영자는 "현장에서는 단순히 몇 년 일했다고 해서 '전문가'로 불리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는 기구 조작에 대한 지식도 부족하고 안전 상황 대응 능력도 낮은 경우가 대부분이다(E)"라고 언급하며, 인력 양성의 질적 수준이 산업 신뢰성과 직결됨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인력 요인이 단기적 정책 우선순위에서는 다소 후순위에 놓일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산업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지탱하는 핵심 기반임을 나타낸다.

다섯째, '기술 개발 및 혁신'은 상위 요인 중 가장 낮은 중요도(0.1061)를 기록하였고, 세부 요인에서도 '친환경 기술 개발', '스마트 기술 도입', '스마트 안전구조 시스템 도입'이 전반적으로 하위권에 위치하였다. 이는 기술 요인의 중요성이 낮다는 의미라기보다, 현재 국내 해양수상레저 기구산업이 기술 혁신 수용 단계를 넘어 보급 및 대중화 단계로 진입하기 위해 아직 이용자 기반, 체험시설, 제도적 수용 환경을 우선적으로 필요로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즉, 전문가들은 기술 개발의 필요성을 부정한 것이 아니라, 현 단계에서 기술 혁신이 산업 성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이용자가 기술을 경험할 수 있는 공간,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제도, 지속적인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문화적 기반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기술 개발 및 혁신은 단기적 활

성화 요인이라기보다, 문화·인프라·제도 기반이 일정 수준 형성된 이후 산업 고도화 단계에서 더욱 중요한 전략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한편, 집단별 분석 결과, 산업 전문가 집단은 '문화 저변 확대(0.3040)'와 '인프라 구축 및 개선(0.2432)'을 가장 중요하게 평가한 반면, 학계 및 공공기관 집단은 '정책 및 제도 기반 구축(0.2771)'과 '인프라 구축 및 개선(0.2522)'을 최우선 요인으로 인식하였다. 이는 해양수상레저 기구산업을 바라보는 현장과 제도권의 관점 차이를 보여준다. 구체적으로, 산업 종사자는 실질적인 체험 공간, 프로그램, 콘텐츠를 통해 이용자를 유입시키고 수요 기반을 확대하는 전략에 중점을 두는 반면, 학계·공공기관 집단은 법·제도의 안정성과 공공 인프라 확충을 통해 산업 기반을 강화하는 접근을 중시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집단 간 차이는 응답자들의 전문 영역과 산업 발전 단계의 영향을 함께 반영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산업계 전문가들은 매출, 이용자 유입, 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시장 현장의 문제를 직접 경험하기 때문에 문화 저변 확대와 인프라 구축을 우선적으로 인식한 반면, 학계 및 공공기관 전문가들은 제도적 안정성, 안전 기준, 공공 인프라 조성 등 산업 기반의 제도화 과정을 보다 중요하게 평가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국내 해양수상레저 기구산업이 아직 성숙 시장이라기보다 보급과 대중화를 확대해야 하는 단계에 있다는 점도 문화·인프라 요인의 중요도를 높인 요인으로 판단된다.

세부 요인 종합 중요도 분석에서도 이러한 차이가 명확히 나타났다. 산업 전문가 집단은 '지역사회 연계 문화인프라 확충', '레저복합공간 및 체험시설 개발', '지자체·정부 협력 기반 구축', '해양레저 관광 콘텐츠 개발' 등 문화·체험·공간 기반 요인을 상위에 위치시킨 반면, 학계·공공기관 집단은 '규제체계 정비 및 법령 일관성 확보', '해양레저 SOC 및 활동지원시설

확충', '기구별 안전기준 및 인증 절차 마련' 등 제도·안전·공공 인프라 중심 요인을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게 평가하였다. 이는 정책 생산자와 산업계 간 인식 차이를 지적한 기존 연구 결과와 일치하며, 해양수상레저 기구산업 정책 설계 시 특정 집단의 시각에만 의존할 경우 정책의 실효성과 수용성이 저하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V. 결론

본 연구는 해양수상레저 기구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우선순위를 도출하고자, 선행 연구 고찰을 통해 다섯 개 상위 요인을 설정하고,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20개의 세부 요인을 구조화한 후, AHP 기법을 활용하여 상·하위 요인과 세부 요인의 상대적 중요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상위 요인에서는 '문화 저변 확대', '인프라 구축 및 개선', '정책 및 제도 기반 구축'이 상위 3개 요인으로 도출되었고, 세부 요인에서는 '레저복합공간 및 체험시설 개발', '지역사회 연계 문화인프라 확충', '해양레저 SOC 및 활동지원시설 확충', '해양레저 관광 콘텐츠 개발', '지자체·정부 협력 기반 구축' 등이 상위권을 차지하였다. 반면, '친환경 기술 개발', '스마트 기술 도입', '스마트 안전 시스템 도입' 등 기술 관련 요인은 상대적으로 낮은 중요도를 나타냈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해양수상레저 기구산업은 단순한 제조·유통 산업이 아니라, 문화·체험·관광·안전·기술이 복합적으로 결합된 전략 산업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으며, 그 중에서도 수요 기반을 확대하는 문화·체험 인프라와 이를 뒷받침할 제도·인프라 기반 정비가 선행되어야 함을 확인하였다. 아울러 산업계와 학계·공공기관 간 인식 차이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향후 정책 설계와 실행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간 관점을 조정·통합하는 거버넌스의 중요성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요인별 우선 순위와 종합 중요도는 해양수상레저 기구산업의 정책 수립, 예산 배분, 인프라 투자, 기술 개발, 인력 양성 등 다양한 의사결정에서 활용 가능한 실증적 기초자료로 기능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적 및 실무적 제언을 제시한다.

첫째, 정부 차원에서는 제도·인증 체계의 정비에 우선 과제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다부처에 분산된 기구 분류, 안전 기준, KC 인증체계를 통합·정비하고, 국제표준과의 정합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전동형·친환경·스마트 기구 등 신유형 장비를 포괄할 수 있는 유연한 규제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특히 '규제 체계 정비 및 법령 일관성 확보'와 '표준 정합성 확보 및 인증제도 개선'이 높은 중요도로 나타난 만큼, 단순 규제 완화가 아니라 일관되고 예측 가능한 규제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

둘째, 지방자치단체는 인프라 기반과 지역 연계 전략의 핵심 주체로서, 도심 접근형 체험 시설, 사계절 활용 가능한 실내·복합 공간, 지역 축제와 연계된 해양레저 프로그램 등을 통해 체험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AHP 결과에서 '레저복합공간 및 체험시설 개발'과 'SOC 및 활동지원시설 확충'이 최상위 요인으로 나타난 점을 고려하면, 지자체는 개별 종목 지원을 넘어 복합 해양레저 거점을 조성하고, 이를 지역 관광·문화 자원과 연계하는 전략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셋째, 산업계(민간 기업)는 이용자 중심 기술과 서비스 혁신을 통해 질적 성장을 견인해야 한다. 기술 요인의 전체 순위는 낮았으나, '이용자 중심 기술 설계'가 기술 영역 내 최상위 요인으로 나타났다는 점은 단순 기능이 아니라 사용자 경험·안전·편의성을 중심에 둔 제품 개발과 서비스 설계가 중요함을 뜻한다. 전동형·공기주입식 기구, 스마트 안전장비 등은 제도

적 불확실성이 존재하더라도, 기업 차원에서 안전성 검증과 사용성 개선, 체험 프로그램 연계 등을 통해 신뢰 가능한 브랜드와 시장을 구축해야 한다.

넷째, 학계와 연구기관은 수요자 연구와 정책 자문을 통해 지식 인프라를 제공해야 한다. '문화 저변 확대' 요인이 최상위로 나타난 만큼, 국민 인식, 체험 동기, 기술 수용 태도, 안전 인식, 제도 신뢰도 등에 대한 정량·정성 연구를 강화하여 문화·체험 기반 확대 전략을 뒷받침하는 실증적 근거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해외 주요국의 법·제도·인증체계 및 마리아·복합단지 운영 사례 등과의 비교 연구를 통해 국내 환경에 적합한 정책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정책 설계의 타당성을 제고해야 한다.

다섯째, 민·관·산·학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이해관계자 간 인식 차이를 조정해야 한다. 산업 종사자는 체험과 문화 기반의 수요 전략을, 학계·공공기관은 제도와 행정 기반의 공급 전략을 중시하는 만큼, 어느 한쪽에 치우친 정책은 실효성이 저하될 수 있다. 따라서 이해관계자 협의체, 공동 연구, 정책 실험 사업 등을 통해 우선순위를 함께 논의하고, 문화·인프라·제도·기술·인력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통합 전략을 설계하는 과정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전문가 집단 중심의 분석과 국내 사례에 초점을 두었다는 한계를 지닌다.

특히 본 연구의 전문가 집단은 산업 현장 경험이 풍부한 실무자와 관련 협회·단체 관계자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산업 현장의 실질적 수요와 체감 문제가 분석 결과에 크게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반면 학계 및 공공기관 전문가, 일반 이용자와 잠재 소비자의 관점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으로 반영되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전문가 집단의 구성을 보다 균형 있게 확대하고, 일반 이용자 및 잠재 수요자를 포함한 후속 분석을 통해 연구 결과의 대표성과 일반화 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이

에 향후 연구에서는 일반 이용자와 잠재 수요자를 포함한 표본 확대, 요인 간 인과관계 분석, 해외 사례와의 비교 분석 등을 통해 본 연구 결과를 보완·확장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본 연구는 해양수상레저 기구산업의 구성 요인을 체계적으로 구조화하고, 상대적 중요도를 실증적으로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향후 산업 활성화 전략 수립과 정책 설계를 위한 의미 있는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 강남선, 김남훈(2013). 해양레저산업 동향 및 산업 경쟁력 확보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항해항만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013(1), 8-9.
- 김경민(2015). 해양레저 활성화 정책 연구 : 정부와 산업계 인식비교분석 중심으로.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정책과학대학원.
- 김설향, 신아름, 황선환(2012). 지상, 수상, 항공레저스포츠관광을 통한 여가만족이 웰니스(Wellness)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체육학회지**, 50(1), 517-528.
- 김엘진(2023년 6월 7일). 전국 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 열풍. 현대해양. <https://www.hdh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8774>.
- 김인, 이현경(2020). 수상레저활동 안전관리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민간경비학회보**, 19(5), 31-56.
- 김정태(2021). 양양 지역 서핑관광에 따른 경관 변화와 특성에 관한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김충환(2023). 해양레저산업의 성장과 육성에 관한 고찰. **산업연구**, 47(3), 209-236.
- 김희원. (2023). 제주연안 연산호 군락 산호의 조형적 특성을 활용한 침구 디자인 개발 연구.
- 디자인 이노베이션 연구, 1-29.
- 박명국, 김성규(2002). 해양레저스포츠 활성화 방안. **한국스포츠산업경영학회지**, 7(1), 207-225.
- 박혜림(2022년 6월 8일). 스마트워치가 100만 원?...스포츠맨을 위한 ‘손목 위 개인 트레이너’[미래산업 플러스]. 헤럴드경제. <https://biz.heraldcorp.com/article/2883399>.
- 서용석(2021년 7월 20일). [해양수산칼럼] 해양레저산업 도약을 위한 탄소중립 실현. 국제뉴스. <https://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key=20210721.22021005789>.
- 성보현(2010). AHP를 활용한 요트관광 제도개선 우선순위 분석. 미간행 석사학위 논문, 한양대학교 대학원.
- 송훈희(2024, 2월 19일). 시흥시, 수도권에 이런 곳이? 해양레저로 뜬 ‘거북섬’. 매일일보. <https://www.m-i.kr/news/articleView.html?idxno=1094150>.
- 신재우(2023). 수상레저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품 디자인 개발에 관한 연구.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대학원.
- 연합뉴스TV(2026년 6월 21일). 도심 속 해양레저 축제 ... 아 라 마 린 페 스티 벌 .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60621144030Y1W>
- 유예지, 김주락(2024). 해양레저관광에 의한 어촌의 젠트리피케이션 전개 양상과 지역주민 태도 - 양양 서핑 관광지를 사례로 -. **대한지리학회지**, 59(1), 91-109.
- 이기춘(2024). 해양스포츠법제에 대한 공법적 관점에서의 현대적 고찰* - 일본과 독일의 해양스포츠 관련법제의 비교를 포함하여 -.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27(1), 135-166.
- 이영진, 송영민(2012). 제주도 해양레저장비산업

- 육성 방안에 대한 고찰. **수산해양교육연구**, 24(2), 286-301.
- 이세환(2020). 수상레저 발전을 위한 수상레저 안전법 개정 분석을 통한 발전방향. **한국국가안보·국민안전학회지**, (10), 109-126.
- 임종현(2025, 5월 19일). 2025 해양레저관광박람회 개막! 해양레저 산업의 미래를 보다. 현대해양. <https://www.hdh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790>
- 조승준(2016). 해양레저스포츠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해양관광연구**, 9(1), 41-59.
- 조우정, 유영동, 장다혜(2025). 친환경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IPA, DENG IPA 및 TOPSIS 통합적 분석. **한국사회체육학회지**, 99, 65-76.
- 지민준(2022). 해양레저스포츠의 활성화 방안으로서 안전관리상 법제적 '안전성'과 참가자의 참여보장 장치인 '법적 안정성' 고찰. **해양비즈니스**, 51, 107-127.
- 지승현(2024, 7월 16일). 수상레저산업 발전 위한 규제 개혁 우선돼야. 현대해양. <https://www.hdh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884>.
- 해양경찰청(2023). 2023년도 수상레저기구 안전인증 기술기준 개발사업 신규 연구개발과제 공고. <https://www.kcg.go.kr/kcg/na/ntt/selectNttInfo.do?nttSn=43611>.
-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2024). 2023년 해양관광시장 소비규모 전년대비 9.3% 증가 추정 (KMI 동향분석 제199호). 부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https://www.kmi.re.kr/web/view.do?idx=3454&rbsIdx=164>
- 해양수산부. (2019).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대책. 관계부처 합동. <https://www.mof.go.kr/doc/ko/selectDoc.do?docSeq=43112&menuSeq=427&bbsSeq=2>
- 해양수산부(2025년 1월 31일). 2023년도 수상레저기구 안전인증 기술기준 개발사업 신규 연구개발과제 공고 [공고 제2025-12호]. <https://www.mof.go.kr/doc/ko/selectDoc.do?menuSeq=375&bbsSeq=9&docSeq=59860>
- Royal Yachting Association(2021, June 22). New research shows watersports participation is on the rise. RYA. <https://www.ry.org.uk/news/new-research-shows-watersports-participation-is-on-the-rise>.
- UNWTO(2023). Marine & Coastal Tourism Report: Tourism Highlights 2023.